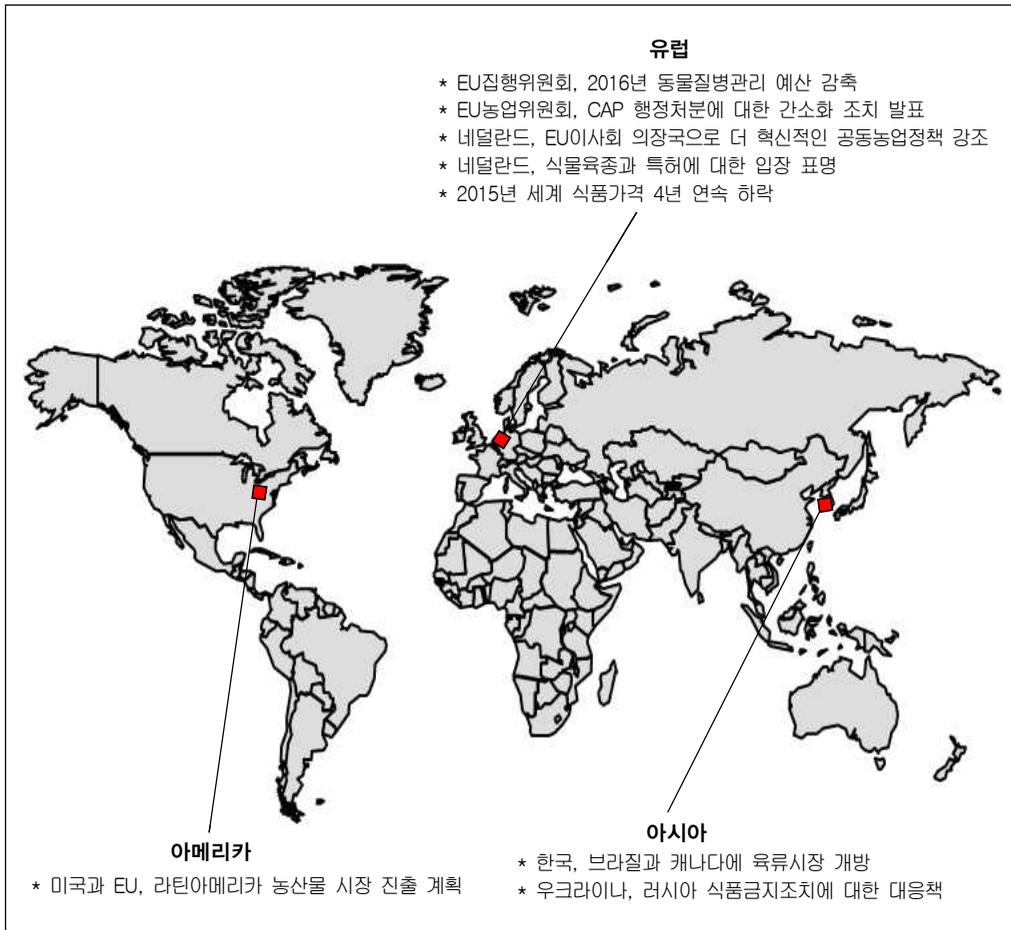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EU집행위원회, 2016년 동물질병관리 예산 감축
2. EU농업위원회, CAP 행정처분에 대한 간소화 조치 발표
3. 미국과 EU, 라틴아메리카 농산물 시장 진출 계획
4. 네덜란드, EU이사회 의장국으로 더 혁신적인 공동농업정책 강조
 5. 네덜란드, 식물육종과 특허에 대한 입장 표명
 6. 한국, 브라질과 캐나다에 육류시장 개방
 7. 우크라이나, 러시아 식품금지조치에 대한 대응책
 8. 2015년 세계 식품가격 4년 연속 하락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6. 2)



EU집행위원회, 2016년 동물질병관리 예산 감축

□ EU집행위원회의, 2016년 동물질병관리 예산 축소 편성

- EU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동물질병과 인축공동전염병(zoonoses) 방지에 1억 6,050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는 2015년과 비교하여 약 10% 감소한 수치임.
- EU집행위원회는 동 자금은 동물질병관리를 위한 박멸(eradication), 관리(control), 감시(surveillance)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 2015년 대비 증가된 690만 유로의 자금은 아프리카 돼지콜레라(African Swine Fever, ASF)를 위한 프로그램에 편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최근 몇 달 간 ASF질병 발발로 분투하고 있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 투입될 것임.
- 반면, 전염성 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TSEs)을 위한 자금은 2015년 1,800만 유로에서 1,215만 유로로 삭감되었음.
 - 이는 한때 EU의 질병관리 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광우병 발발 사례의 지속 감소를 반영함.
- 한편, 2015년 대비 약 50%이하 수준으로 감소된 약 744만 유로는 청설병(Bluetongue)을 위해 편성되었음.
 - 조류독감을 위한 자금은 프랑스에서 여전히 문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 소결핵증(Bovine Tuberculosis, bTB)을 위한 6,300만 유로는 작년의 소브루셀라병(Bovine Brucellosis)과 광견병(Rabies)에 편성된 예산과 거의 유사함.

□ 긍정적인 신호

- 살모넬라증(Salmonellosis) 감소 프로그램 예산은 2015년 1,900만 유로에서 2016년에는 1,700만 유로로 감축되었음.

-
- EU집행위원회는 EU공동자금이 살모넬라증의 인간 감염 사례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소브루셀라병과 기타 인수공통 질병의 경우에도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고 언급하였음.
 - 살모넬라증의 인간 감염 사례는 2007년, 15만 1,292건에서 2014년, 8만 677건으로 감소되었음.
 -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야생동물의 광견병에 대항하는 구강백신(oral vaccination)을 위한 공동자금 프로그램의 성공을 강조하였음.
 - 동 프로그램들은 EU가 이전에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견병 박멸 수준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EU내 야생동물의 총 광견병 사례 수는 소수의 인간 사례와 함께 2007년, 814건에서 2014년, 216건으로 상당히 감소함.
 - 동물질병 발발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EU집행위원회는 지속적인 EU공동자금 조성 및 운영을 통해 회원국 이 예비대책, 질병 감시, 박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2016년에 총 130개의 프로그램들이 EU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5년에 선정된 프로그램의 수보다 다소 적은 수입.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15.)

EU농업위원회, CAP 행정처분에 대한 간소화 조치 발표

□ EU농업위원회, EU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간소화 조치 추가 발표

- EU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EU 공동농업정책(CAP) 간소화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였음.
 -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행정처분의 체계 간소화와 CAP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옐로카드 시스템 도입임.
- 2016년 1월 18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총회에서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6년 초 중으로 농업시장에 대한 공동조직(공동시장체제, CMO) 규정(특히, 공적개입과 개별저장금, 수출입허가,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농업위원회는 CAP 2기의 금융상품 편성 규정과 소규모 수혜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간소화 조치를 발표할 계획임.
-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논의 중 집행위원(Phil Hogan)은 허위신고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 계획을 밝혔음.
 - 이는 현재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커지고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하는데 따른 조치임.
 - 집행위원(Phil Hogan)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농업인이 보조금 적용 대상 토지를 실제보다 과대하게 신고 시, 과대신고 된 토지가치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현행 제도는 토지가치의 2배를 적용하고 있음.
 - 반면 총 면적의 3% 또는 2ha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과대신고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 옐로카드 시스템

- 집행위원(Phil Hogan)은 소위 “옐로카드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옐로카드 시스템은 과대신고 정도가 크지 않고 기존에 위반 사례가 없는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를 50% 감면해 주는 대신 이듬해 현장점검 대상 농가로

지정하는 방식임.

- 과대신고 된 토지의 크기가 총 토지면적의 10% 미만인 경우 과태료 감면(엘로카드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난 11월, EU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이후 35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관리당국은 지원신청에 문제가 있었던 농가들이 35일간 문제를 시정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함.
- 금주 발표된 정책들과 유예기간 정책은 2016년에 청구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발표된 CAP 간소화 조치는 다음과 같음(2016년 1월 22일 기준).

조치사항	분야	관련 법률	적용시기
생태중점관리지역(Ecological Focus Area, EFA)의 기록사항 간소화(회원국들은 특정 생태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정보를 확보하면 됨)*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생태중점관리지역 기준(EFA layer) 내 생태중점관리지역 설정 규정 유연화*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산울타리 또는 녹지지구의 간격을 최대 4미터까지 허용*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생태중점관리지역 인접지역의 규정 완화(농업인의 토지경계와 생태중점관리 인접지역 사이에 제한적인 완충지대 인정)*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토지구획식별시스템(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 LPIS)내 영구초지 기록사항 규정 완화*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생태중점관리지역 설정 기준 완화*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예비검사 이후 35일간의 유예기간 설정**	P1: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현장검사의 축소**	P1: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현장검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변화(표본검사 도입)**	P1: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토지구획식별시스템(LPIS)내 영구초지 설정 기준 완화**	P1: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입법 규정	2016
회원국의 자발적 결합지원(Voluntary Coupled Support) 조치 간 자금 전용 허용**	P1: 결합 지원	위임 규정	2016
자발적 결합지원조치의 단위 지원 금액 조절 권한 회원국에 부여**	P1: 결합 지원	위임 규정	2016
자발적 결합지원조치에 대한 변동사항의 고지 과정 단순화**	P1: 결합 지원	위임 규정	2016
청년농업인 지원자격 규정 단순화(회원국에)	P1: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위임 규정	2016

(계속)

조치사항	분야	관련 법률	적용시기
자율성 확대)**			
농촌개발정책의 공동청구시스템**	P2: 농촌개발 자금	입법 규정	2016
P1 지원금 신청 시 과태료 인해(지원 신청 시 토지 규모를 과대 신고했을 경우 과대신고 된 토지 가치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적용)***	P1: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P1 지원금 신청 시 실수에 대해 옐로카드 시스템 도입(과대신고 된 토지가 총 토지면적의 10% 미만일 경우 과태료의 50%만 부과)***	P1: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주: 1) P1: 17], P2: 27]
 2) *2015년 5월 발표, **2015년 11월 발표, ***2016년 1월 발표
 자료: Agra Europe(2016).

□ 간소화 정책 추진 배경

- 집행위원(Phil Hogan)은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하에서 농업인들이 규정을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 결국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위와 같은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그는 간소화 정책으로 CAP 규정이 보다 균형 잡히고 이해하기 쉽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술의 발달로 농업인들이 지원 대상 토지를 신고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집행위원(Phil Hogan)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농업인들이 항상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행정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언급하였음.
 - 이에 농업정책 규정은 제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농업인들이 보조금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추가 간소화 조치

- 지난 수개월간 제시된 몇 가지 정책들과 더불어 집행위원(Phil Hogan)은 ‘녹색화’ 정책에 대한 간소화 조치들을 2016년 여름까지 발표하고 2017년 이후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집행위원(Phil Hogan)은 앞으로 농가 지원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그는 EU집행위가 조만간 농산물 시장

과 관련된 위임 및 입법 규정에 대해 종합적인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공동시장체제(CMO) 규제하의 약 200여개 입법 규정들을 EU 리스본 조약의 규정에 맞도록 조정해 왔으며 그 숫자 또한 약 40여 개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집행위원(Phil Hogan)은 규정의 간소화 및 리스본 조약 규정(특히 공적개입, 개별저장금, 수출입 허가, 생산자 조직에 관한 규정)과의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위임 및 입법 규정이 2016년 초에 채택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집행위원(Phil Hogan) EU집행위가 소규모 수혜자들에 대한 필요 정보 요건을 간소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편성 규칙을 간소화하는 입법규정을 2016년 초에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함.

□ 농업인조합의 반응

- EU농업인보호조합(Copa Cogeca) 사무총장(Pekka Pesonen)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 그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는 혁신을 가로막고 효율성 증대를 어렵게 한다고 말하며 조합이 제일 원하는 바는 공동농업정책(특히 녹화정책)의 진정한 간소화를 통한 농업인들의 편의 증대라고 밝힘.
 - 그는 농업인들이 요구해왔던 간소화 조치들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게 되는 지나친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금주 총회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간소화 조치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EU 내 생산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조치에 대해 논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
 - 작년 5월의 유럽의회 공청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은 EU집행위가 제대로 공동농업정책 간소화 조치를 취하려면 단순히 시행령을 변경하는 방법보다는 공동농업정책의 법률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22.)

미국과 EU, 라틴아메리카 농산물 시장 진출 계획

□ 미국, 라틴아메리카 농산물 시장 진출 확대 계획

- EU와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시함.
- 미국 농무부 장관(Tom Vilsack)은 3월에 무역사절단 파견을 발표하였으며, EU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의 집행위원(Phil Hogan)은 2월 중 라틴아메리카 방문을 예정하고 있음.
 - 2016년 1월 19일, 미국 농무부는 미국 농식품의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칠레와 페루에 무역사절단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칠레와 페루는 작년 10월에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국임.
- 미국 농무부 장관(Tom Vilsack)은 칠레와 페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중산층 인구 증가로 인해 고품질의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미국의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해졌으므로 미국 기업들(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시장을 확장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 EU, 라틴아메리카 농산물 시장 개척 움직임

- 이와 마찬가지로 EU 또한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농식품 수입금지조치 이후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또한 TPP의 체결로 인해 EU는 국제무대에서 TPP 가맹국 및 기타 국가와의 개별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진전시킬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논의를 지속하는데 대한 압박 또한 받고 있음.
- 최근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6년에는 EU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외교적인

공세를 취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은 EU에게 있어 핵심적인 시장임.
- 집행위원(Phil Hogan) 2016년 2월, EU대표단과 함께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방문할 계획이며, 뒤이어 중국과 일본, 그리고 2016년 말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계획임.

- 지난해 EU와 멕시코는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FTA하에서 무역량을 늘리는 방법 등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상호 동의하였음.
- EU의 증류주에 대한 수입장벽 문제로 약간의 분쟁이 있지만, EU와 콜롬비아의 양자 간 무역협정 또한 2013년 8월부터 발효된 상태임.
 - 마찬가지로 EU-페루간 무역협정도 동 시기에 발효되었음.
- 또한 EU는 지난 2003년부터 발효된 칠레와의 양자 간 무역협정을 확대(지리적 표시(GIs) 상품의 인정 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칠레는 세계 포도주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임.
- 남아메리카 메르코수르(MERCOSUR) 연합과의 협상은 최근 EU 회원국들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며 다시 난관에 봉착함.

□ TTIP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의 연구

- 반면 지난 1월 11일의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의회 벨기에 의원(Marca Tarabella)은 최근 발표된 미국 농무부의 TTIP 타결 후 농업부문 영향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우려를 나타냈음.
 - 미국 농무부의 연구는 TTIP에 따른 농업부문에서 EU보다는 미국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인 증가세가 예측되는 반면 EU는 낮은 수입 가격과 거시경제적 이윤에서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함.
 - 또한 연구는 EU와 미국 간의 농산물 무역 규모 성장세는 2011년을 기준으로 연간 63억 달러(57억 유로)에서 116억 달러(106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진척이 별

로 없었음.

- 다음 회담은 2월 초로 예정되어있으며 회담의 주요 쟁점사안인 공공 물품조달 사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알려짐.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22.)

네덜란드, EU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더 혁신적인 공동농업정책 강조

□ EU농업부 장관들, 2020년 이후의 공농농업정책(CAP) 토론 예정

- 2016년 6월까지 EU이사회(Council)의 의장국인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 이후 CAP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CAP 간소화 추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정책이 농장 혁신과 지속가능한 기후 친화적인 생산을 어떻게 장려하는지 감독할 것임.
- 2016년 1월 11일,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ComAgri)에 ‘환경보호정책(greening)’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CAP 간소화 문제를 다루길 원한다고 언급하였음.
- EU농업부 장관들은 2020년 이후의 공농농업정책(CAP) 관련 잠재적 변화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방대한 CAP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농업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유럽의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다양한 입법적 및 비입법적 문제들의 진보를 희망한다고 밝힘.
 - 2016년 6월 말까지 EU유기식품법(EU organic food legislation) 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유럽의회의원들의 공명을 얻었음.
 - 한편, 유럽의회 조사위원(Martin Häusling)은 이에 대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하며, 좋은 결과가 핵심이라며 경고함.

□ 미래식량(Future of food)에 관한 논의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유럽의회의원들에게 비공식적 농장위원회(Farm council)는 미래식량을 주제로 선정하여 CAP이 혁신 및 지속가능한 생산

모델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식량 생산 혁신은 대규모의 농장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농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목표이며, EU는 특히 소규모 농장 모델 혁신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CAP은 EU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식량 생산 증가를 위한 혁신은 세계 인구 증가 추세 속에서 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식량의 품질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함.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기후-스마트” 농업으로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만일 혁신과 기술에 더욱 집중한다면 CAP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환경보호정책 관련 조사 필요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CAP 간소화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정책의 효율성과 농부들을 위한 CAP 규정 단순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앞으로 진행할 EU집행위원회의 환경보호정책 검토 목표를 중점으로 하여, 생태중점관리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의 완충 요소들(buffer strip element)의 준수와 관련한 네덜란드의 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요사항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아닌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따라서 간소화 추진과 2014-2020개혁의 잠재적 중기 검토가 우선순위를 강조함.
- 한편, 유럽의회의원들이 낮은 가격과 이윤 감소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응하여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이러한 현상이 위기임은 인정하였으나, 과잉생산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음.
 - 이에 EU 전반적인 농식품 시스템의 미래와 EU정책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15.)

네덜란드, 식물육종과 특허에 대한 입장 표명

□ 네덜란드, 식물육종과 특허의 더 나은 균형 추구

- 네덜란드는 EU이사회의 의장직을 이용하여 식물 육종가들(plant breeders)의 권리와 특허권(patent rights)간의 더 나은 균형을 추구할 계획임.
 - 현재의 특허권은 전통적 육종법으로 생산된 식물 재료(plant material)의 특허 등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금주 유럽의회의원들에게 자연적(natural)인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허용을 반대하며, 이는 농식품망(agri-food chain)의 상당 부분에 있어 독점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 2016년 1월 11일,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수많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식물육종과 특허권에 관한 문제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유럽의회의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ComAgri)에게 의장국으로서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였음.
- 네덜란드는 2015년,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심사위원회(appeal board)에 의해 논란이 된 판결을 따르고 있는 소위 “육종가 면제(breeders' exemption)”라 불리는 식물 품종권리(variety rights)에 관한 EU규정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이 토론하길 원한다고 밝힘.
 - 육종가 면제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는 품종 보호권(protected varieties)을 가진 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 모든 식물 육종가들이 품종 보호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 유럽 특허청 규정의 논란

- 2015년 4월, 유럽 특허청 심사위원회는 Plant Bioscience Limited사의 브로콜리 특허와 이스라엘 주의 토마토 특허에 관하여 2003년 유럽 특허청의 초기 결정을 옹호

하였음.

-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전통적 육종법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특허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유럽 특허청은 암수교배(crossing)와 식물의 선택(selection)을 포함한 근본적인 생물학적 육종법을 통해 식물 생산물(plant products)을 얻었을 지라도 과일, 종자(seeds), 식물의 일부와 같은 식물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하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

○ Plant Bioscience Limited사는 동 규정은 EU내의 식물 및 식물 생산물 특허권 보호에 대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함.

- 두 작물에 대한 특허 자격을 가진 Monsanto사 또한 이에 동의했으며, 특허권 시스템은 혁신을 촉진하고, 발명가들과 넓은 사회의 이해관계 균형을 위한 방법이라고 일컬었음.

○ 그러나 육종가 면제가 혁신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위한 효과적인 지적 재산보호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종자협회(European Seed Association, ESA)는 유럽 특허청의 결정을 맹비난하였음.

- 유럽종자협회는 식물 품종 및 근본적인 생물학적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 의해 얻은 식물들에 대한 특허자격으로부터의 효율적인 제외를 원함.

○ 네덜란드는 유럽 특허청의 의견은 아주 우려되는 바이며, 식물 육종가들은 특허권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생물학적 재료에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2015년 12월, 대다수의 유럽의회의원들은 전통적 육종기법을 이용한 특허 식물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유럽의회의 결의를 지지했음.

□ EU집행위원회의 견해

○ EU집행위원회는 의장국은 회원국들 정부 간의 회담을 감독하면서 효율적으로 중립의 위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간 EU의장직을 맡을 네덜란드는 공식적으로 더욱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네덜란드의 입장은 명확함. 금주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Martijn van Dam)은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의원들에게 “거의 자연적인(more or less natural)”

발명품들은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EU회원국들 정부와 EU집행위원회의 유럽 특허청 규정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며 식물 육종가들의 권리에 대한 EU규정과의 호환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볼 것임.
 - 현재 유럽특허조약(EPC)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EU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를 포함한 총 39개국 있음.
- 한편, EU집행위원회는 'cisgenesis'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식물 육종법들이 유전자 변형에 관한 EU의 법적 체계에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평가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음.
 - 이는 2월 혹은 3월에 발표될 예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15.)

한국, 브라질과 캐나다에 육류시장 개방

□ 한국, 브라질 돼지고기에 대한 시장개방과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

- 한국이 브라질 돼지고기에 대해 최초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또한 캐나다 쇠고기
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 브라질 농업부는 아직 한국으로의 수출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약 10여 년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돼지고기
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발표함.
- 브라질은 돼지고기를 산타카타리나에서만 수출할 수 있었음.
 - 산타카타리나는 브라질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지이며 유일한 구제역 청정구
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임.
 - 산타카타리나를 제외한 브라질 전 지역은 구제역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실시
하고 있음.
 - 브라질 농업부는 산타카타리나의 대 한국 돼지고기 수출이 수출량 기준 연간
3만 3,000톤, 수출액 기준 1억 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 브라질 농업부의 국제관계부 처장(Tatiana Palermo)은 구제역과 유행성 설사로 인해
한국 내 돼지고기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브라질이 한국 소비자
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한국은 세계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들 중 하나로 현재는 EU와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 주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음.
 -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음 단계는 위생인증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
질의 개별 돼지고기 생산설비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임.
- 브라질의 동물성단백질협회(Animal Protein Association) 회장(Francisco Turra) 금번 협
상을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업자들의 승리’라고 표현하였음.
 - 그는 금번 협상으로 동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 지역

으로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브라질은 이미 한국에 대한 닭고기 수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브라질의 돼지고기 수출이 시작되면 한국 시장에서 EU산 돼지고기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 현재 EU산 돼지고기는 한국 돼지고기 수입량 중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음.
 -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 2015년 2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광우병 발병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임시로 중단된 바 있음.
 - 캐나다 축산업협회(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는 한국 시장의 재개방은 캐나다 수출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반겼음.
 - 캐나다 축산업협회장(Dave Solverson)은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는 수요가 낮은 부위와 내장 등에 대해 잠재 수요가 큰 시장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시장은 캐나다의 축산업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량 중 한국으로의 수출은 1%(3,200톤, 2,580만 달러)를 차지하였음.
 - 이는 수출량 기준으로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국 중 6위에 해당함.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한국과 캐나다간의 FTA가 타결되면서 캐나다 축산업협회는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연간 5,0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캐나다 축산업협회는 캐나다가 '광우병 통제국'이므로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한 모든 연령의 가축에 대한 수출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캐나다 축산업협회장(Dave Solverson)은 아직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국제무역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08.)

우크라이나, 러시아 식품금지조치에 대한 대응책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식품 수입금지조치 대응책 강구

- 우크라이나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밝혔으며, 또한 보복성 수입금지 조치 또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무역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이미 중단되었음.
-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직전인 1월 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중단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농식품 수입을 금지하였음.
 - 이에 우크라이나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류와 각종 낙농제품 등 여러 러시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음.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입 금지 품목은 양파, 캐비어, 케첩, 비스킷 등이 포함되며 더욱 증가되었음.

□ 우크라이나의 대응 계획

- 동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통상개발부 장관(Aivaras Abromavičius)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러시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유럽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EU와 동 문제에 대해 이미 논의를 마쳤으며, 미국, 캐나다의 통상부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 통상개발부 차관(Natalia Mykolska)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의 수입 금지는 2016년 8월 5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 **원적(transshipment) 봉쇄**

-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러시아로 직접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을 거쳐 수입되는 우크라이나 제품 또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제통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우크라이나의 통상개발부는 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조치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방해하는지 보다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 통상개발부 차관(Natalia Mykolska)은 자유로운 수송은 국제무역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상품이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되면 물류비용이 23%에서 50%까지 인상된다고 주장함.
 -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요건들을 부과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완전히 우회하고 대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들의 분석**

-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EU 및 미국 등과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도록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 Nomura International의 애널리스트(Timothy Ash)는 Kyiv Post의 칼럼을 통해 러시아가 무역, 경제, 부채 및 에너지자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성을 키우게 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그러나 이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서기 전에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일수도 있다고 분석했음. 중요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양측이 점차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유럽의회, 우크라이나에 EU와의 결속 강화 촉구**

- 반면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몰도바에 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을 비준한 1년 이후부터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개혁을 지속하도록 촉구함.
 -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3개국은 EU와의 정치적, 경제적 결속 강화를 추

구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에 크림반도의 점령을 포함하여 3국에 대한 직·간접적 간섭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음.

- 유럽의회는 1월 21일 개최된 총회에서 이와 같은 3국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결의안에 따르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적용 첫 해에 조지아의 대 EU 수출은 15% 증가하였으며 몰도바의 대 EU수출 또한 62% 증가하였음.
 - 우크라이나 또한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됨. 우크라이나는 이미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조항들(농산품에 대한 EU의 우선적 수입 등)을 조기 발효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 동 결의안은 EU와의 정치·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개혁을 통한 분명한 진전이 전제되어야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에 대한 EU의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1.22.)

2015년 세계 식품 가격 4년 연속 하락

□ 2015년 세계 식료품 가격 4년 연속 하락

- 2015년 세계 식료품 가격(global food commodity prices)이 4년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약 19.1%로 극적인 감소를 보임.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는 최근 세계식량 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 FFPI)를 발표하며, 세계 수요 감소 대비 풍부한 공급과 미국의 달러 절상이 2015년의 세계 식료품가격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 FAO에 따르면 침체된 세계 경제가 금속시장(metals market)에서부터 에너지시장까지의 급격한 가격하락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몇 년간 식품가격 하락에도 기여하였음.
- 유제품 가격은 2014년 대비 28.5% 하락(2015년 평균 160.3포인트)으로 모든 상품군 중에서 가장 극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연평균수치를 기록하였음.
 - 2015년은 EU 내 많은 농부들에게 힘든 한 해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낙농업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입음.
 - 낙농업 생산자들은 공급 상황을 악화시키는 EU의 우유생산할당(production quotas)의 종료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음.
 - EU 내 5,000여명 이상의 농부들이 2015년 9월에 브뤼셀에 모여 항의하였으며, EU집행위원회의 재빠른 일괄원조정책(an aid package)을 요구하였음.
- 세계 설탕가격은 두 번째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음.
 - 2014년 대비 21% 하락하였으며, 2015년 평균 190.7포인트임.
- 세계 채소가격은 세 번째로 큰 하락세를 보였음.
 - 2014년 대비 19% 하락하였으며 2015년 평균 147 포인트로 9년 간 낮은 수치를 달성했음.

- 곡물과 육류가격 또한 2015년에 극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각각 15.4%(29포인트 감소)와 15.1%(29.9포인트 감소) 하락하였음.

□ 2015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지속적인 하락세 추세 반영

- 2015년 12월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2015년 감소 추세를 여전히 따르고 있음.
 - 2015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1월 기준의 수정치(Revised November values)보다 1%하락한 수치인 평균 154.1포인트임.
 - 2015년 12월 세계 곡물, 유제품, 육류가격은 하락한 반면, 식물성 기름과 설량 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인 가격하락에 대응하였음.
- 육류가격은 2.2% 하락하여 152.1포인트를 기록함.
 - 양고기, 쇠고기,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였음.
 - FAO에 따르면 미국의 쇠고기 수입 수요 감소로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EU 돼지고기 생산량의 급증이 국내와 수출가격 하락을 유발함.
- 곡물가격은 1.3%하락했으며, 151.6포인트를 달성하였음.
 - 아르헨티나의 수출세(export taxes) 제거로 세계 시장으로의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곡물 가격 하락을 압박하였음.
 - 심화된 수출 경쟁과 침체된 국제 수요 가운데 옥수수가격 또한 하락하였음.
 - 꾸준한 가격의 낮은 품질의 인디카(Indica) 쌀과 방향성(aromatic)쌀 구매의 부흥으로 쌀 가격은 더욱 안정적이었음.
- 유제품 가격 또한 1%만큼 감소하여 149.5포인트를 기록함.
 - FAO에 따르면 이는 버터가격 상승과 치즈가격 불변과 함께 분유(milk powders) 가격이 하락한 결과임.
 - 전지분유(dry whole milk)에 대한 낮은 수요로 제조업체들이 다른 유제품 생산에 집중하였음.
 - 버터는 특히 중동,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수요가 높았던 제품이었으며, 이는 2015년 12월에 버터가격을 3%이상 상승시켰음.
 - EU에서 정부개입에 따른 비축량(intervention stock) 보증가격으로 탈지분유(skim milk powder)의 판매 가능성이 확대되어 전지분유보다 버터와 탈지분유 생산을 촉진됨.

-
- 식물성 유지(vegetable oil) 가격은 2.1%상승한 141.1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음.
 - 이는 지난 6개월 간 콩기름가격 급증에 의한 것임.
 - 콩에 대한 세계수요 전망은 브라질의 콩 작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팜유(palm oil) 가격은 안정적인데, FAO에 따르면 이는 남아시아에서의 생산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세계 수입 수요에 감소로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 설탕가격 또한 0.6%상승하여 152.1포인트를 기록함.
 - 세계 설탕가격은 과도한 강수량으로 인한 브라질의 남중앙(South-Central) 생산 지역의 수확 지연에 대한 우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 특히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 등 기타 주요생산국에서의 설탕수확 감소에 대한 전망 또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2.08.)

자료 작성: 흥예선 연구원